

## 우려되는 大學改革 방향

姜 來 熙

(中央大 英語英文學科)

우리 사회의 대학교육이 제대로 서 있지 못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것이다. 대학사회는 지금 재정구조 취약에 따른 운영상 어려움은 말할 것도 없고 도덕적 권위마저 나락으로 떨어지는 아득한 실추를 경험하고 있다. 금년초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든 입시부정 사건이나 사립대학 운영과 관련하여 상지대 재단 이사장 김문기씨가 실형을 선고받은 일 등은 오늘날 우리 대학사회가 어떤 꼴을 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극적 표현이었다. 어디 입시부정뿐이겠는가. 교수채용을 둘러싼 금전수수, 사학재단의 전횡, 비민주적 학사운영, 학사관리의 부실화, 교육의 질적 저하 등 언론에 죽각 보도되지는 않지만 대학교육의 질적 도덕적 역량과 전문성을 해치고 대학의 권위에 먹칠하는 일이 대학사회 전반에서 공공연히 자행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학이 사회의 지적 도덕적 동량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그 자체 어불성설로 보인다.

하지만 언제고 대학을 이런 꼴로 둘 수는 없으며 국내외의 객관적 조건을 살펴봐도 대학이 지금 모습만 가지고서는 살아남을 성실지도 않다. 한국 대학들은 앞으로 5년 안팎으로 극심한 경쟁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형편을 보면 취학인구 변동으로 인하여 대학 진학자 수가 급속도로 감소, 입시경쟁률이 1:1로까지 된다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대학들은 입시생 유치를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게 될 것이고 일부는 도태당하는 사태가 필시 벌어질 것이다. 게다가 1995년 우루과이라운드 실시로 국내 '교육시장'이 개방될 터이니 대학간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지 않을 수 없다. 외국의 우수한 대학이 국내에 분교를 지을 경우, 가뜩이나 부실한 운영으로 내실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는 한국의 많은 대학들은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안간힘을 써야 할 것이다. 원하던 원하지 않든 각 대학은 개혁의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전 같으면 절대 비밀로 부치던 학교의 회계를 공개하고 교수강의평가제를 실시하겠다고 나서는 대학들이 상당수 생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최근 일어나는 변화는 대학사회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자 자율적으로 대응하는 측면보다는 외부의 개혁 압력에 수동적으로 반응하고 있을 뿐이라는 인상 또한 강하다. 지난 10월 27일 교육부장관이 전국총학장회의에서 “대학의 자율적인 개혁 추진 정도에 따라 대학에 대한 행·재정 지원을 차별화”한다는 방침을 밝히더니(조선일보 10월 28일자) 언론도 최근 들어와서 덩달아 대학교육

위기를 지적하는 기사들을 자주 실는 것을 보면 외부 압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절로 든다. 교육부장관의 방침을 사회면 특기사로 보도한 조선일보가 같은 날짜 다른 면에서는 “대학생 학습량 너무 적다”라는 제하로 대학교육의 부실함을 지적했는가 하면, 한국일보는 10월 29일자로 국립대학 운영의 방만함을 꼬집는 내용으로 박스기사를 낸과 아울러 사설로는 대학교육의 총체적인 위기를 문제삼았다. 또한 최근 실시한 한 여론조사는 한국 사회에서 개혁이 가장 필요한 곳이 대학이라는 결과를 내놓기도 하였다.

어쨌거나 개혁이 피할 수 없는 데세로 떠오르고 있다면 중요한 것은 그 방향일 터인데 개혁 추동이 타율적인 만큼 개혁의 방향 설정에서도 어쩐지 단추를 잘못 낀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이 은연중에 교수를 겨냥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을 듯하다. 최근 들어와서 ‘교수강의평가제’가 대학사회 관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물론 각 대학이 교수강의평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데세이며 또 당연한 일이다. ‘한번 교수면 종신 교수’가 관행이 된다는 것은 교수 인구 전체의 자질 저하를 가져올 가능성도 있으며, 특히 강의평가는 학생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권리행사다. 그런데 상황은 강의평가제 실시를 그렇게 단순하게만 보게 만들지 않는다. 대학사회는 그동안 교수의 권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학생들의 대 사회적 발언을 억압하라는 국가권력의 요구에 부응하여—그동안 해직이나 재임용 탈락을 당한 교수들 상당수가 사회 민주화와 학원 민주화를 위해 애쓴 사람들이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교수의 권위를 앞세워 왔다. 그러나 상황 변화로 학생통제가 그다지 필요없게 된 지금, 교수의 권위 신장보다는 그 신분제한이 사회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보이게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강의평가제 실시는 그런 움직임의 일환으로 보인다.

이런 맥락에서 대학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 조짐들이 그 속에 대학사회의 발전에 결코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논리, 특히 시장 논리를 안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듯하다.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곰곰이 따져보면 이제 대학사회는 바야흐로 시장경제체제로 돌입할 것임을 예견할 수 있다. 개혁의 추진도에 따라 정부 지원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은 어느 대학이 얼마나 운영을 잘 하느냐에 따라 지원을 하겠다는 말이다. 대학정책실장도 취임하면서 부실한 ‘지방 국립대학의 사립화’ 정책을 내비친 적이 있다고 한다. 이제 각 대학은 능력대로 자구책을 마련하라는 것이 ‘문민정부’의 대학정책인 셈이다. 이런 입장은 교육의 공공적 성격을 무시한, 한국 대학교육의 커다란 후퇴를 초래할 정책 기조이며 대학에 있는 교수들과 학생들에게는 생존에 관련된 문제를 나몰라라 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지난 몇 년 동안 입시 부정을 포함하여 총체적인 교육 위기를 겪은 바 있는 대학사회는 ‘문민정부’의 출범으로 일종의 ‘경영 합리화’ 과정에 돌입하고 있다. 그동안 억압적 정권 아래 사회 전부문에서 발생한 경영 불합리 요소들을 개혁하려는 김영삼 정권은 한국 자본주의 발전에서 미효율적인 요소들을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목표로 삼고 있다. 사정 작업, 실명제 실시, 군부 정비 등 현정권이 수행하는 일련의 ‘개혁’ 조치들은 사실 한국 자본주의를 본체도에 올려 놓으려는 현정권의 정책기조가 드러난 것들이다. 교수강의평가제 실시를 위시한 대학의 최근 변화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경영 합리화’는 지금까지 대학사회를 지배한 봉건적 요소들을 개선할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하지만 동시에 ‘경영 합리화’는 대학을 자본의 논리에 예속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대학의 상대적 자율성을 더욱 침해할 것으로 우려된다. ■